

이달의 초점

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의 현황과 과제

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

| 이소정 |

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와 과제

| 성혜영 |

노후준비의 현황과 과제: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

| 황남희 |

노후준비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함의

| 이해정 |


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기획의 글 (Foreword)

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

한국은 2025년 11월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. 노후준비는 이제 개인적인 과제를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. 노후준비는 소득, 건강, 여가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미리 설계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을 확장하고,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의 빈곤, 질병, 고독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다.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「노후준비지원법」을 제정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4대 영역의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아울러 이 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‘노후준비 실태조사’를 하고 있으며, 그 결과를 국민의 노후준비수준 점검,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.

2026년 9월호 ‘이달의 초점’ 주제는 ‘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의 현황과 과제’이다. 최근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지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. 첫 번째 초점인 ‘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’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, 중앙의 표준화·플랫폼 기능과 지자체의 지역자원 연계를 결합한 거버넌스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. 두 번째 초점인 ‘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와 과제’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노후준비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. 다음 2개 초점은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. 세 번째 초점에서는 4대 영역의 노후준비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격차 분석을 통해 취약집단별 맞춤형 진단과 상담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. 네 번째 초점에서는 4대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한 결과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.

이번 호의 논의가 노후준비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,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유익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.